

#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빚 부담 40% ↓

(5년→3년)

당국, 채무자 상환부담 축소  
금융권 신용평가 강화 기대

# 5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며칠 전 채권자 집회에 다녀온 A씨(50). 150만원의 월급 가운데 약 40만원(변제금)을 5년 동안 낼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이 4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회생 인가 후 3년간의 변제기간을 거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제 기간 축소는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 기간이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웠던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에게 상환 부담을 감소, 채권자인 금융권에 신용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금이 줄어들면서 채권 회수율 하락을 경험한 금융권이 신용평가를 강화시켜(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갱생형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

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에 한한다. 다만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채무자의 기존 연체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변제완료나 면책기간 전까지 공공정보를 관리한다. 따라서 통장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신청-면담-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 순으로, 인가 결정이후 개개인의 가용소득과 채무 상태에 따라 변제기간이 결정되며, 일정 변제기간을 거쳐 면책 받는다.

현재까지 개인회생을 통해 지원된 채무자는 약 350만명이며, 2003년 372만명 이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올해 95만명(3월 말 기준)으로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개인회생절차(2018.06.03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 출신지 차별금지·필기시험 도입 등 '은행 채용 모범규준' 공개

# 지방銀·제2금융권 "현실 반영 안돼... 일괄 적용 어렵다"

지방 특성상 해당지역 인재 선호  
자체시험 도입한 제2금융도 난색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가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탄생한 모범규준안이 각 은행에 맞는 인재 채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방 인재 채용이 필수지만 모범규준에 따른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자체시험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던 일부 제2금융권은 모범규준 적용에 난색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



지난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연합뉴스

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다.

모범규준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도입 권고,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연합회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사인 산업, 농업,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모범규준 마련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이어서 민간기업

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히 필기시험이 공정성과 객관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정량 평가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율성에 금이 간다"며 "은행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모범 규준 적용은 합리적인 인력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이 마련한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모범규준을 언급하고 있어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에 6개 주요 지방은행 인사 실무진들도 참여했지만 현재 은행권은 개별적인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여건보다는 공동으로 규준을 적용하는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편성을 하

더라도 모범규준을 도입할 경우 회사 사정에 맞는 직원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영업 특성상 특정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신 인재를 선호했지만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인력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행 기반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정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투자나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채용 절차 모범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1금융권에 가해졌던 '채용절차 기준 마련' 압박이 고스란히 제2금융권에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대기업 계열의 보험·카드사는 그룹사 공통의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일괄적인 모범규준을 수용하는 것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일자리에서 밀려난 10대... 취업자 수 29% 감소

(15~19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19세 취업자 작년비 7.6만명 ↓  
최저임금·10대 인구 감소 등 영향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대(15~19세) 청소년들이 일자리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을 한 10대 10명 중 8명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6000명(28.6%) 감소했다.

15~19세 취업자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제공된 1982년 7월 이후 올해 4월이 가장 컸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9월에는 4.1% 증가했으나 같은 해 10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감소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에 머물렀으나 4월에 28.6%로 급격히 높아졌다.

15~19세 취업자 다수는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취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 업종에 많이 종사하며 대다수가 임시·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15~19세 취업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정액 급여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9세 이하였다.

29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9678원이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15~19세 근로자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10대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큰 흐름으로 보면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점진적이므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10대 후반 취업자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4월 15~19세 인구 감소율은 5.7%로 같은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율(28.6%)보다 훨씬 낮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시장



지난해 7월 서울 은행구청에서 열린 '2017 은행 특성화고·청년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정보를 사진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 1면 '흔들리는 P2P금융'서 계속

##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추가피해 방지 법제화 시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대출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상태다.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현황 공시', '투자금과 P2P업체 자본분리' 등이 담겨있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 지도에 불과해 별다른 강제·구속력이 없다. P2P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P2P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대출 사기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빨리 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나유리 기자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